격월간
정세와 동향

제10호
[2013_10_17]

모심의 살림의 길

이슈 진단

불확실성의 시대에 농업살림의 길

직거래운동과 생협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살림의 말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속하는가?

가을걷이잔치한마당에서 생각해보는 '순수증여'의 의미

한살림

사단법인
모심과 살림연구소

- 목 차 -

이슈 진단

• 불확실성의 시대에 농업살림의 길 :
직거래운동과 생협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 1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국내 농업과 먹거리 전반을 위협하는 한중 FTA 8
•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급식 방사능 관련 조례 제정 9
• 일회용 사회에서 자원순환 사회로 11
• 허술한 GMO 관리 실태와 밥상과 농업에 대한 위협 12
• 농업・먹거리 관련 행사 및 소식 13

〔경제・생활〕

• 세계 유기식품 시장 동향과 우리의 현실 15
• 에너지 소비 실태와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논란 17
•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사회적 금융 19

〔사회・환경〕

• 국경을 넘어 생활 속에 침투해오는 방사능 오염 문제 21
• 온난화 논란? 인류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23
• 골프장과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4
• 수원시의 '차 없이 살기' 한 달간의 실험과 의미 25

〔정치・사회운동〕

• 역사교과서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27
• 골든 브릿지 노조의 최장기 파업이 던지는 질문 28
• 식량주권과 먹거리 인권에 대하여 29

살림의 말

•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속하는가? :
가을걷이잔치한마당에서 생각해보는 '순수증여'의 의미 33

이슈 진단

불확실성의 시대에 농업살림의 길

- 직거래운동과 생협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 -

■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농업과 식량의 위기

- 유엔의 '제5차 기후변화보고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재와 미래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시켜 줌

・지난 9월 27일 유엔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종합적 연구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임을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힘.

・40여 개 국 25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4년간의 연구조사를 통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95%의 신뢰수준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부의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임.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수준은 기후변화보고서가 처음 나온 1995년 50%에서 66%(2001년), 90%(2007년)에 이어 이번에 95%로 높아짐으로써, 기후변화가 과학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실천의 과제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줌.

-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보다는 지구상의 물과 에너지의 순환 사이클에 교란이 일어나 발생하게 되는 기상변동과 생태계 변화의 예측불가능성에 있음.

・지구 전체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균형을 유지해 오던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체계를 붕괴시키는 기후변화는 오랜 기간 일정한 기상 조건에서 적응해 살아오던 사람과 동식물들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근래에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환경 난민' 문제도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난민'이 2억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최근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 해역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이 탄 배가 좌초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곳 지중해 수역을 '난민들의 무덤'으로

만드는 끔찍한 일도 정치적 요인 못지않게 가뭄과 사막화와 같은 환경적 재앙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문제는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해도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이런 '예견된 재난' 상황에 대한 인류사회의 대응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임.

-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은 결국 농업과 식량의 위기라는 구체적인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농업임. 불규칙적인 기상변동에 따른 농작물 생육 환경의 불안정성은 농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식량 자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

・농업 생산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증가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식량위기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인구가 9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보다 70% 이상의 식량이 더 생산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함. 특히 인구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개도국의 경우 지금보다 100% 이상의 식량을 더 생산해야 한다고 내다봄.

・기후변화 시대에 식량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20세기 말과 비교해 21세기 말(2071~2100년)에 한반도 기온은 3.4℃, 강수량은 17.3% 높아지고, 국내 쌀 자급률은 50%대로 떨어져, 쌀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함.

- 우리의 농업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함께 왜곡된 시장구조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지금의 농산물 가격 구조는 농업이 당면한 현실과 식량위기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농산물은 상품화된 가격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농산물 가격구조는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켜 버리고 있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지역성과 계절성이 강한 만큼 자연 환경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매우 큰 것이 특징임.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널뛰기' 하듯 변동 폭이 큰 농산물 가격구조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음.

・특히 농업 전체가 자본주의 시장구조 속에 편입된 상태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이 풍년이 되어도 걱정이고 흉년이 되어도 걱정인 처지에 놓여 있음.

・문제는 세계 농식품업체들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을

새로운 이윤 수취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임. 즉 농업과 식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역설적으로 초과이윤 획득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2011~2013년 중반사이에 기후변화와 함께 금융위기 국면에서 투기자본들이 곡물시장에 뛰어든 결과 세계 식량가격이 2003~2008년보다 약 80% 상승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음.

・결국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높은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생산과 소비 영역을 아우르는 대안적인 시장 체계를 만들어내는데서 찾을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여전히 남은 과제들

- 올해 들어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에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음. 여기에는 직거래가 생산자에게는 수익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

・직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소비자(단체)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직거래 장터, 직매장, 꾸러미, 학교급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정부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내년에 가칭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을 제정할 예정임. 또한 올해 말까지 직거래 매장을 40개 만든 후 2016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직거래 사업에는 지자체들 외에도 농산물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 풍부한 기반시설을 갖춘 농협이 주요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있음. 농협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신토불이 매장에 직거래 매장과 직거래 장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직거래와 관련한 농협의 계통출하 비중을 작년 16%에서 2016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최근의 높은 관심이 한편으로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농업과 식량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정부는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의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한국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농산물 거래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정부는 우리의 농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한중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업부문의 대폭 개방으로 엄청난 농업 희생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 농산물 개방과 무역자유화 조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직거래의 정신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범람이 미칠 영향은 직거래로 인한 효과를 충분히 앞도하고도 남음.

· 사실 그동안의 정부 농업정책 기조를 보더라도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외국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절하고, 대신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

·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세우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정책 역시 주체와 방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정부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자로 기존의 농협·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에다 벤처기업, 전통시장 등을 포함시키고, 나아가 농민단체와 연계해 대형마트 내 직매장 설치도 지원할 계획임.

· 게다가 우리사회에 직거래운동을 선도해 온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단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또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대행하는 유통단체로 보면서 직거래 사업의 주요 주체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농업살림을 위한 직거래운동의 본래 의미와 역할

- 농업과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살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직거래운동의 본래 정신과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투기적 욕망을 부추기는 경제구조는 농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음. 특히 대규모 산업농을 통한 단작화, 원거리화와 국경을 넘어선 농산물의 대량생산 및 유통 체계는 먹거리 안전성은 물론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자급 기반을 위협하고 있음.

· 결국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는 사회 전체적인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농업살림의 길 또한 세계의 농업과 먹거리 체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농식품 다국적기업들과, 농식품의 가격 불안정성을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계 금융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서 찾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불안정하고 왜곡된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활

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 못지않게 우리사회에서 직거래운동을 시작했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분명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직거래운동에는 유통 효율화와 가격보상의 차원을 넘어 생산과 소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서로살림의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음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쟁 관계로 만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뜻있는 농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서로를 살리는 협동의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공동체적이고 호혜적인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직거래운동이 지향하는 방향이자 목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경제활동 주체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 고리를 만드는 것, 나아가 직거래를 통해 오가는 물품이 단순히 가격이 매겨진 상품이 아니라 생산자의 정신과 소비자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직거래운동이 가진 역할이라 할 수 있음.

・이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직거래 정책 역시 식생활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생산-소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와 식생활 문화 향상,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자급 기반 확충으로 그 의미와 역할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살림 직거래운동의 의미와 과제

- 농업이 무너진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난 27년간 이어온 한살림의 직거래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사회경제적, 생태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 낼 충격들을 흡수하여 생산과 소비의 안정성과 사회-경제-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현재 시장의 농산물 가격 구조는 해마다, 달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살림이 애초 직거래운동을 통해 내세웠던 상호 약정을 통한 '책임생산-책임소비'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존 공생의 대안적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하고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음.

・한살림의 직거래운동 정신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음. 한살림이 주창하는 '생산과 소비는 하나'는 바로 생산과 소비, 농촌과 도시, 식(食)과 농(農)의 거리를 좁혀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음.

・그동안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순히 물품을 거래하는 경제적 관계를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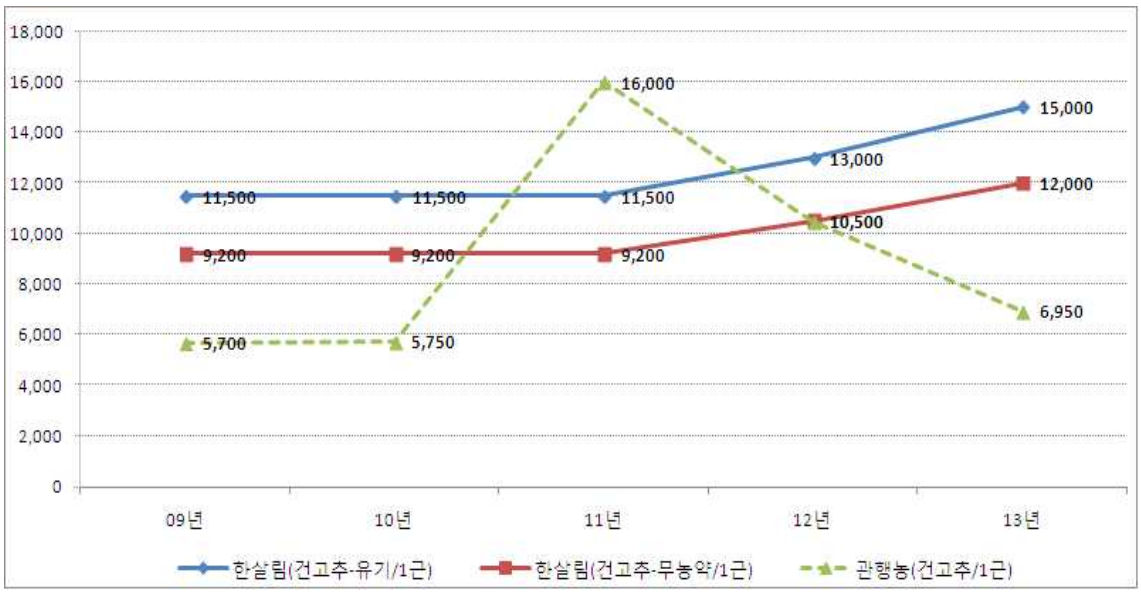
서, 생산지 체험과 단오행사, 가을걷이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해 왔음.

- 어려운 때일수록 직거래운동의 본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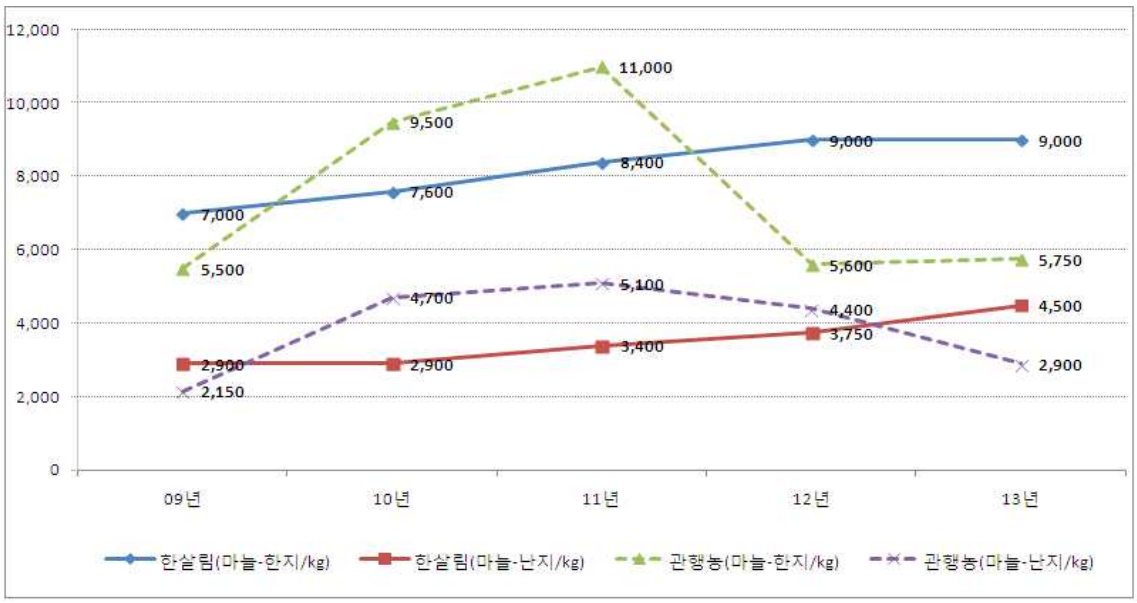
- 올해 들어 마늘과 고추 농사의 작황이 좋아 시중 가격이 작년에 비해 매우 싸진 상황에서도 한살림은 직거래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마늘과 고추에 대해 시중보다 높은 약정 가격을 책정한 상태임.
- 올해를 기준으로만 보면, 한살림의 마늘과 고추가격은 관행농으로 재배한 것 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 한살림의 농산물이 유기와 무농약 등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가격 부담감이 큰 것도 현실임.
- 하지만 한살림의 사전 약정 가격 체계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재배한 한살림 농산물이 관행농으로 재배한 시중 농산물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공급되었던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결국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양산하면서 요동치는 현행 농산물 거래 시스템에 우리의 농업과 먹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 직거래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경제질서를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올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제공하는 현행 자본주의 시장구조가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삶에 영향을 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것은 불안정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농업생산 기반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
- 고추의 경우를 보더라도, 올해 다행히 기상조건이 맞아서 작황이 좋았지만 중요한 점은 고추 재배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수입 고추가 채우고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 고추 재배면적은 2001년 7만ha에서 2012년 4만5천ha로 35% 감소되었고, 생산량도 2001년 18만톤에서 2012년 10만 톤으로 감소한 반면, 2012년 수입 건고추 물량은 9만4천톤(정부 수입물량 440톤 포함)으로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만큼 언제든지 경쟁과 효율, 이윤추구를 앞세운 '돈 중심'(資本)의 논리가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음. 그만큼 어려운 때일수록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는 노력 못지않게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내는 노력이 더 없이 중요함.
- 한살림 또한 그동안 걸어온 직거래운동의 본래 정신을 놓치지 않고 더욱 확장하

고 심화시키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 노력이 더욱 필요함. 요동치는 기상 변동과 농업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속에서도 농토를 지키면서 생명의 먹을거리를 땀 흘려 생산해온 농촌 생산자들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생활 여건에서도 직거래의 마음을 담아 선뜻 물품 이용에 나서는 도시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농업살림의 길이 더 없이 의미 있고 귀중한 때임.

<최근 5년간 한살림과 관행농의 건고추 가격 동향>



<최근 5년간 한살림과 관행농의 마늘 가격 동향>



※참고: 한살림 생산가격, 관행농 도매가격
건고추 화건(상품) 10월가격, 마늘(한지) 8월 상품, 마늘(난지) 8월 상품 기준

분야별 동향 1

농업 • 먹거리

● 국내 농업과 먹거리 전반을 위협하는 한중 FTA

-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함

・지난 9월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7차 협상이 개최됨.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1단계로 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함. 정부는 2014년 비준을 목표로 올해 말 2단계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이번 1단계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의 협상기본지침에 합의했는데, 특히 농축산물이 포함된 상품분야는 '일반', '민감', '초민감' 방식으로 분류됨.

・일반 품목은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며, 민감 품목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되는 완전개방 품목으로, 전체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가 대상이 됨. 한편, 현재 교역대상이 되는 전체 품목 1만 2,000여개 중 10%에 해당하는 1,200여개의 품목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양허제외, 부분철폐,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등으로 부분 개방하게 되어 있음.

- 한중 FTA에 대한 산업계와 농업계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농업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이미 발효되어 있는 한미 FTA나, 한EU FTA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됨. 즉 FTA로 미국이나 EU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은 주로 축산물과 저장성이 긴 과일임.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 농산물과 생산시기가 겹치는데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FTA 체결로 무역자유화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재배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임.

・이런 가운데 산업계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한중 FTA 추진에 적극적임 무역협회와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 4단체 등 42개 단체와 기관으로 구성된 민간대책위는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농림부는 농산물 전체 품목이 1,500여 개이고, 이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수가 약 6~700개 정도인데, 전체 교역품목 중 약 10%에 해당하는 1,200여개의 초민감 품목에 농수산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민감 품목 선정에 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만큼 초민감 품목으로 농업이 우선 보호를 받는다고 장담하기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초민감 품목군이라 하더라도 양허제외 항목 외에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은 완전한 보호장치가 아니라 마늘, 고추, 양파 등이 TRQ 물량으로 가격 폭락의 피해를 반복해 온 경험이 있음.

・현재 농민단체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농정 대개혁'을 내세우며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FTA가 국내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치밀한 사전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

・한살림은 생산자연합회와 함께 한중 FTA의 문제점을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업살림을 위해 FTA 협상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함.

●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급식 방사능 관련 조례 제정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짐

・교육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4천327kg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시도별로는 서울시내 학교에서 2011년 이후 806kg을 사용했고, 대전 542kg, 경남 519kg, 부산 430kg, 광주 416kg, 강원 402kg, 전남 304kg 등으로 나타남. 품목별로는 가다랑어포가 1천610kg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꽁치 1천51kg, 명태 430kg, 연어살 270kg, 갈치 175kg, 임연수어 138kg, 코다리 112kg 등이 급식 재료로 쓰였음.

-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매일 먹는 급식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 방사능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학교급식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례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 과정에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방사능을 비롯한 유해물질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의회는 9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음.

・한편 전라북도, 강원도, 부산, 충남, 부산시 등에서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80%가 들어오는 부산시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대전 등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이런 흐름과 함께 경남지역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1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자재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정부에 요구했으며, 젓갈 등 가공 수산물의 경우 안전기준치가 없어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조례 제정만으로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준비와 실천 노력들이 요청되고 있음

・방사능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 체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은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는 농산물,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쇄도하는 검사 요청을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한계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문기관에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거나 장비 구입으로 자체 검사를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식재료로 소비된 후에 방사성 물질의 검출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더구나 고가의 검사 장비를 몇 대 갖추고 모든 학교의 식재료를 검사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문제임.

・한편, 조례제정 확대뿐 아니라 학교급식을 비롯한 식재료 선택에 대한 학부모들의 직접적 실천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모임'(차일드세이브)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의 식단에서 생선을 줄이거나 아예 빼기 시작했다는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음. 학부모들이 학교장이나 원장, 영양사 등과 면담을 요청해 식단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처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활동들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회용 사회에서 자원순환 사회로

- 일회용 사회가 만들어 낸 폐기물(쓰레기) 문제

・엘빈 토플러는 지금의 시대를 '쓰고버리는 사회' 즉 '일회용 사회'(disposable society)로 진단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영속성'에서 '일회성'으로 바뀜으로써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와 환경 파괴는 물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단절되어버렸다고 이야기 함.

・'대량채취-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로 이어지는 현대 산업문명의 단적인 모습은 폐기물(쓰레기)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최근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투입된 폐기물 중 70%가 재활용성으로 밝혀짐. 생활폐기물의 41%에 달하는 약 2만 톤이 매일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고, 건설 및 산업폐기물도 매일 약 3만5천 톤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임.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쓸모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기물(쓰레기)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환경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4위이며, 재활용 가능자원의 약 56%가 단순소각이나 매립되는 실정임. 따라서 자원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의 3R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여 물질과 에너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모든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이 예고됨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2014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임. 작년에는 가축분뇨, 올해 1월 1일부터는 음식물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바 있음. 따라서 모든 유기성 폐기물은 육상에서만 처리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지난 2월 전국 대도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법망을 피해 음폐수가 농지에 뿌려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13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이 입법예고됨. 자원순환법 발의안에 대해 정부는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 폐자원 처리 및 활용의 전 과정(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의 통합적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업체를 한 곳에 모아(자원순환종합단지 등) 규모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에 대해 부담금을 통한 처벌 방식은 산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음.

・한편, 유기질비료 업계는 순환사회에서 부산물비료 산업이 중요한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한국자연순환단체연대, 전국재활용비대위 등 관련 단체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순환자원사회에 대한 개념 정립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나아가 경제구조와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결국 일회용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 정책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쓰레기)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기존의 '처리' 관점을 '순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내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허술한 GMO 관리 실태와 밥상과 농업에 대한 위협

- 국정감사를 통해 GMO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식용 GMO의 국내 수입이 역대 최대치였던 것이 농촌진흥청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됨.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사용하는 식용 GMO의 경우 2008년 총 수입 규모가 155만톤, 7326억원이었는데, 매년 늘어나 작년 2012년에 총 190만톤, 88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작년의 사료용 GMO 수입 현황은 옥수수가 3081만톤, 면실류는 58만5000톤으로 2008년 대비 58% 증가함.

・문제는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가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 소완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과정에서 단순히 수입물량만 전산관리해서 수입금액을 알 수 없고, 수입 회사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임.

・또한 작년 한 해 GMO 가공식품이 1만3천여 톤 수입되었으나, 대형마트 등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미국산 식품 9종뿐임. 따라서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4대 대기업(CJ제일제당, 대상, 삼양제넥스, 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전 제품에서는 GMO표시 제품이 전무한 실정임.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은 이를 악용해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고,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해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음.

・GMO 사료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문제인데, 지난 2008년 이후 사료

용 GMO 수입업자가 국내 운반 및 가공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비의도적으로 환경 방출된 옥수수, 면실유 등 낙곡이나 자생식물체가 발견되어 형사고발된 사례가 30개소에 달함.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GMO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용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해온 GMO 작물이 17작물 133종이며, 이중 3작물 6종에 대해 안전성 점검을 진행 중에 있음.

- GMO로부터 국민 건강과 먹거리,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GMO반대생명운동연대 회원들은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 완전 표시제' 실현을 촉구함.

・GMO반대 생명운동연대는 지난 8월부터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8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이들 단체는 매년 10월 16일을 '반-GMO의 날'(일명 반지의 날)로 정해 GMO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해 오고 있음.

・현재 GMO반대 생명운동연대에는 한살림연합,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흙살림,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녹색평론사, 우리농전국도시생활공동체대표자협의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슬로푸드문화원 등이 함께하고 있음.

● 농업・먹거리 관련 행사 및 소식[1)]

- 식량주권 국제컨퍼런스 개최(2013. 9. 14-15, 미국 뉴욕 예일대학교)

・지난 9월 중순 미국 뉴욕의 예일대학교에서는 '식량주권에 관한 비판적 대화'라는 제목의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됨.[2)] 예일대 농업연구프로그램과 '농민연구 저널(Journal of Peasant Studies)가 주최한 이 자리에는 농업과 먹거리 관련 세계의 저명 학자들과 농민 활동가, 연구자들이 참여해 총 82편의 논문이 발표됨.

・소농연구의 석학인 테오도르 샤닌, 소농을 연구한 미국의 인류학자 제임스 스코트('농민의 도덕경제'),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 맥마이클('거대한 역설'), 캐나다의 농업정치경제학자 제니퍼 클랩('식량의 제국'), 캐나다의 지리학자이자 실천적 연구자인 아네트 데스마레이스('비아캄페시나'), 미국의 농업사회학자 잭 클로펜버그('

1) 이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 책임연구원이 정리함.
2) http://www.yale.edu/agrarianstudies/foodsovereignty에 발표문 전체가 모두 올라와 있음.

농업생명공학의 정치경제') 같은 저명한 연구자들과, 피터 로셋('식량주권'), 라즈 파텔('식량전쟁', '먹거리반란', '경제학의 배신') 등 비아캄페시나와 푸드퍼스트를 넘나드는 실천적 연구자 등이 발표자로 참석함.

- 한국에서는 이대 아시아여성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김신효정씨가 "여성의 토착지식과 식량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전여농의 토종종자 보전활동의 의미에 대해 발표함.
- 이번 컨퍼런스는 1990년대 중반 전지구적 농민운동 네트워크인 비아캄페시나에서 처음 제기해 국제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개념인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는 자리로 마련됨.
- 회의에서는 작금의 전지구적 식량위기와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농지수탈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농민운동 진영이 식량주권 개념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소비자/시민들과 연대해 현재의 먹거리체계를 바꾸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신간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

-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가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의 아카데미와 함께 진행한 "유기농지도 전문가교육"의 내용을 정리한 책<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는 책이 발간됨.[3)]
- 유기농지도 교육과정은 참여형 학습방식으로 2014년까지 두 차례 연수 과정이 운영될 예정임. 올해는 지자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했고, 내년부터는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각자 지역에 돌아가 유기농민과 연계된 조직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책의 구성 내용을 보면, "1부 왜 유기농업인가"에서는 현재의 글로벌 먹거리체계 속에서 유기농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2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유기농업의 원칙과 목표부터 시작해서 토양, 작물, 퇴비, 천적/잡초, 축산, 육종, 농가소득 등을 폭넓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3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국내의 유기농 실천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유통문제와 함께 유기농전환 진단분석표 작성법을 다루고 있음.
- 한편,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가 대중용으로 정리한 책이라면, <유기농업 매뉴얼>은 교재로 정리한 것으로, 내년 농촌진흥청에 새로 개설되는 유기농업 지도사 교육에서 주교재로 활용될 예정임.[4)]

3) 정대이 편저, 2013,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 들녘.
4) 구입은 http://lib.rda.go.kr/pod에서 가능.

분야별 동향 2 경제 • 생활

● 세계 유기식품 시장 동향과 우리의 현실

-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임

・2011년 유기식품[5] 시장규모는 약 630억 달러(약 68조원)로 1999년 150억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함. 또 최근 5년간(2007-2011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6.4%로, 같은 기간 세계 전체식품 시장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2.6%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임.

・유기식품 시장의 대부분은 북미(48%)와 유럽(41%)으로 전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미국이 약 210억 유로(30조원)로 44%를 차지하고, 뒤이어 독일(14%), 프랑스(8%), 캐나다(4%), 영국(4%) 순임.

・1인 연평균 유기식품 소비액은 스위스가 177유로(약 26만원)로 가장 높고, 뒤이어 덴마크(162유로), 룩셈부르크(134유로), 오스트리아(127유로) 순임.

- 소비 확대와 함께 유기농지 규모도 증가함

・유기농지는 2002년 이래 매년 20% 이상 확대되어 201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720만 헥타르임. 이 중 오세아니아가 1,220만 헥타르로 33%를 차지하며, 유럽(1,060만 헥타르, 29%), 남미(690만 헥타르, 18%), 아시아(370만 헥타르, 10%), 북미(280만 헥타르, 7%), 아프리카(110만 헥타르, 3%) 순임.

・국가별로는 호주(12%), 아르헨티나(3.8%), 미국(1.9%), 중국(1.9%), 스페인(1.6%) 순이고, 경지 면적 중 유기농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포클랜드(35.9%), 리히텐슈타인(29.3%), 오스트리아(19.7%),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17.5%), 스웨덴(15.4%) 순임.

・생산자 수는 2002년 약 44만 명에서 2011년 180만 명으로 4.1배 늘어났고, 지역별로는 아시아(34%), 아프리카(30%), 남미(18%), 유럽(16%)순임. 국가별로는 인도(약 55만명), 우간다(약 19만명), 멕시코(약 17만명), 탄자니아(약 15만명), 이디오피아(약 12만명) 순으로 보고됨.

- 경쟁업체 증가, 유기동등성 제도 시행,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유기식품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5) 유기식품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의미하며,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유기농산물을 의미함.

·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월마트, 테스코, 코스트코, 크레프트 등 글로벌 식품업체와 슈퍼마켓 체인들이 유기식품 시장에 뛰어들었고, 인수합병을 통해 점포 수와 규모의 대형화에 나서 왔음. 최근에도 미국 크로거(Kroger)사가 유기농식품 시장에 진입했고, 고품질 고가격 정책을 고수하던 홀푸드마켓은 저가 마케팅을 진행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가간 유기 동등성 인증은 유기식품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음. 2009년 미국과 캐나다, 캐나다와 EU가 유기 동등성 인증 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식품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유기 동등성 협약'을 체결함. 이로써 자국에서 생산·가공·포장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식품을 상대국에 수출할 때 별도 인증절차 없이 '유기농(organic)' 표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됨.

· 여기에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국과 EU 등 27개 국가들이 추진 중인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거대 FTA로 관세 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기식품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 한국 유기식품 시장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음

·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2000년대 중반부터 CJ, 대상, 동원 등 대기업이 유기농 시장에 참여하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음. 유통 분야에서도 유기농 전문점 초록마을이 2011년 263개 매장에서 2013년 5월 현재 340개로 수를 크게 늘렸으며, 올가홀푸드는 같은 기간 51개에서 63개로 매장 숫자를 늘려옴. 생협의 매장수도 계속 증가해 한살림은 2011년 134개에서 162개로, 아이쿱생협은 107에서 138개, 두레생협은 75개에서 95개로 늘어남.

· 이에 따른 국내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2008년 4,694억원(농산물 2,536억원, 가공식품 2,158억원)규모에서 2011년 현재 6,777억원(농산물 3,000억원, 가공식품 3,777억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량은 2008년 114,649톤에서 123,314톤으로 증가함.

- 수입 유기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료 비중은 13%에 불과

· 유기식품 수입도 급증하고 있음. 2011년 현재 총 수입규모는 43,435톤으로, 유기농산물 14,719톤, 유기가공식품 28,716톤 규모임. 가공식품의 경우 2007년에 35개 국가에서 40,357천달러(약 433억원) 규모로 수입하던 데서 2011년 40개 국가 64,079천달러(약 688억원) 규모로 늘어남.

· 품목별 수입액은 과·채 가공품(9,994천달러), 두류가공품(5,960천달러), 갈색설탕

(4,378천달러), 당류가공품(3,656천달러), 바나나/신선(3,522천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5,5487천달러), 호주(7,320천달러), 브라질(5,004천달러), 터키(3,887천달러), 터키(3,887천달러), 콜롬비아(3,367천달러)순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입액의 약 55%를 차지함.

・한편,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85%는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 완제품을 포함한 전체 유기가공식품 중 국내산 비중은 13%에 불과함.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고 관세가 철폐되게 되면, 국내산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제 환경 변화와 소득 격차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행태에 영향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통계청의 20세 이상 국민의식 조사 결과,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52.5%로, 2011년에 비해 4.4%p 감소했으며, 200만원 미만(44.1%)보다 600만원 이상(68.1%) 가구에서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 농산물 구매 방해요인으로는 '가격이 비싸다'(75.8%), '믿기 어렵다'(55.0%), '구별이 힘들다'(37.3%), '판매점이 많지 않다'(30.5%), '종류가 많지 않다'(19.0%) 순으로 나타남.

・경제적으로 저성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농산물 소비에 있어 가격 민감도가 높아져,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먹거리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한편,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83.8%는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92.9%의 응답자가 '사람들의 생활습관 때문에 환경이 많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가운데 한살림은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그동안의 활동들 즉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병재사용운동', '물고기 운동('물'을 아끼고 살리며, '고기' 반찬 없는 식단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름 에너지를 아껴 쓰는 생활실천 운동) 등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유기농운동의 정체성을 살려서, 경제와 환경 영역의 동시적 위기 상황에서 생산, 소비, 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힘 있게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소비 실태와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논란[6)]

- 급증하는 전력 수요의 주요 원인은 산업용 전략의 증가에 있음

6) 이 자료의 주된 내용은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요(판매량)는 약 455.07 TWh로 10년 전인 2001년 257.73 TWh에 비해 76.6% 증가함. 연평균 증가율은 약 6.0%로, OECD 평균의 1.7배임.

・특히 2008~9년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전력수요는 마이너스로 감소하거나 0% 대의 증가율만을 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4.5%, 2009년 2.4% 등 증가율만 감소했을 뿐 절대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2012년 현재 전체 전력비중 가운데 산업용이 53.4%로 가장 높고, 이어서 상업용(25.3%), 가정용(13.6%) 순으로 나타남. 10년 전인 2003년에는 산업용(51.2%), 상업용(26.7%), 가정용(15.2%) 순이어서, 지난 10년간 가정용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산업용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지난 10년간 전체 전력량은 평균 58.9%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산업용이 150,387GWh에서 249,136GWh로 65.7%의 증가율을 보였고, 뒤이어 상업용이 78,511GWh에서 118,277GWh로 50.7%, 가정용이 44,572GWh에서 63,536GWh로 42.5%의 증가율을 보임.

・가정용에 비해 산업용이 약 5.2배 높은 사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산업용 전력에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이 적용되어 전력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급증한 점을 들고 있음.

-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문제와 해결 방향

・2008년 이후 전기요금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총괄원가 대비 전기판매수익에 따른 원가회수율은 2007년 93.7%에서 2012년 88.4%로 나타남.

・원가 상승의 주 요인은 발전 부문에서 기인함. 발전에 필요한 연료(유류, LNG, 유연탄)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전력 부족에 대응해서 고비용 발전기의 가동이 늘어났기 때문임. 그 결과 전체 총괄원가 중 발전원가 비중이 2007년 74%에서 2012년에는 86%로 높아짐.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2007년 1조 5,568억원의 흑자 기업에서 2008년 적자로 돌아서고, 2012년에 4조 7,8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부채비중도 2007년 49.1%에서 2012년 133.2%로 84.1%의 부채 증가율을 보임.

・따라서 전기요금 제도는 원가회수율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요금 제도를 현실화는 방법 못지않게 실질적인 전력 수요 감축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은 1000kW 이상 고압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사회

문화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원전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산업계를 포함한 경제구조 전반의 개선 노력 없이 민간 차원의 자발적 절약 노력을 요구하기에는 설득력과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를 위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 노력이 시급함.

●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사회적 금융

-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처한 자본의 문제

・2013년 8월 말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전국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총 2,388개로, 전월 2,039개 대비 17.1% 늘어남. 이 중 일반협동조합 2,314개(96.9%), 일반협동조합연합회 8개(0.3%), 사회적협동조합 66개(2.8%)임. 협동조합 인가율은 신청 대비 94.4%(이 중 일반협동조합은 96.3%, 사회적협동조합은 56.4%)로 높은 편임.

・유통, 도·소매, 서비스,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이 창업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금융업 진출 금지조항을 포함해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출자금 외에 자본조달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생 협동조합들의 자본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사회적 금융의 4가지 형태

・최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영역에서 자본조달 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회적 금융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금융으로 이해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7)]

‣ '마이크로 크레딧' : 빈곤계층의 소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함. 대표적인 예로 인도의 그라민 은행, 한국에는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등이 있음.

‣ '사회책임투자' :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 환경, 인권 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 1980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은 친환경 유기농, 주택공급, 소액금융, 공정무역과 같은 '윤리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면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음.

‣ '지역(공동체)금융' : 지역공동체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낙후 지역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재무적 지원 사업을 진행함. 미국에는 다양한

7)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및 재구성함.

형태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이 1000여개 가량 존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부터 신협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체 회복과 인력양성에 기여한 역사가 있음.

- '협동금융' : 공동의 필요와 열망에 따라 자본을 모아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 계모임, 공제회, 각종 상호부조 형태가 포함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금융 조직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아주 소수이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한국 사회적 금융의 씨앗>

구분	내용
은평신협	· 최근 은평신협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목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은평두레생협의 매장 설립과 살림의료생협 전세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었고, 이들은 은평신협에 계좌를 만들어 거래하고 있음. · 이런 사례를 듣고 지역에 에너지협동조합이 은평신협에 계좌를 개설하기도 함.
토닥토닥 협동조합	· 금융협동과 재능나눔을 두 축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2월 설립. · 조합원 자격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주거비, 생활비,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조합원 대출이 주요 사업임. · 또 영어, 작곡, 자격증, 이삿짐 나르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나누고 마일리지를 쌓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토닥이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공동체은행 빙고	· 용산구 해방촌에 위치한 게스츠하우스 빈집의 구성원들이 주거자금 해결을 위한 공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시작. · 2013년 8월 현재 156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대부분 게스츠하우스에 숙박했거나, 현재 주거 중인 사람들로 구성. · 주요 활동은 주거공간 임대 및 확보, 대출, 공동체 활동 지원 등임.
동자동 공동기금	· 용산구 동자동 사랑방마을의 공제 협동조합으로 한국교회봉사단의 지원으로 2011년 3월 출범. · 2012년 12월 현재 조합원 수는 380명으로, 자립, 자활을 목표로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무담보, 무이자로 긴급자금(주거, 의료, 생활)을 대출.
갈거리 협동조합	· 강원도 원주에서 노숙인을 중심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긴급자금(주거, 학자금, 부식비, 병원비 등)을 소액 대출함. · 원주밝음신협의 지원으로 빈곤층 스스로 조합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음.
금융감독원	· 최근 취약계층을 돕고 고용을 확대시키는 '사회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구매목표비율제'가 도입되고, 전용 대출상품도 개발될 예정임.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임.

분야별 동향 3 사회 • 환경

● 국경을 넘어 생활 속에 침투해오는 방사능오염 문제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높아지는 국민 불안감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의당이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다는 대답이 96.6%를 나타냈으며(매우 불안 69.2%, 불안 27.4%),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93.1%에 달함. 향후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산 농축수산물 전면 수입금지가 38.3%, 전수 검역 등 검역 강화가 34.5%, 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 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24.1%로 나타나 대체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수입수산물 검역과 방사능 검사 등을 맡은 공무원들이 수입업체로부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돼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검역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당국의 검역에 관한 불신은 더 높아지고 있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학교급식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지난달 6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함. 이는 일본 정부의 자료 제공이 불충분해 위험 예측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이들 8개 현의 수산물 중 50종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해 왔음.

・또한 식약처는 지난달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성 요오드는 100B/kg, 세슘은 50Bq/kg(기존100Bq/kg)로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함.

-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오염 문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동 지방에서도 우유와 시금치 등 주요 식품에서 세슘 등 원전에서만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지역 어린이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꼴로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지난해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역의 일부 어류에서 방사성 세슘137이 최근 5년 평균농도보다 훨씬 높게 검출됐던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원전주변 인근해역의 어류에 대한 조사결과, 고리원전에서는 방사선 세슘137 검출량이 최근 5년간 농도범위의 23배, 월성원전에서는 70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밝힘. 후

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국내 해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국내 원전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논란 파문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신세계 백화점의 갈치, 고등어 등 동·남해산 수산물 매출은 9월 들어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롯데마트 또한 8월 한 달간 국산 고등어 소비량이 31.5%, 갈치는 11.8% 감소했다고 밝힘.

・일반 가정 밥상에 주로 오르던 갈치와 고등어 등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알래스카산 연어 같은 먼바다 수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산지에 따른 소비 변화 패턴도 감지됨. 이러한 소비 불안 심리에 따라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는 먼 바다 수산물을 기획 판매하는 등 새롭게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도 함.

・이처럼 방사능오염 문제는 '후쿠시마' 또는 '일본'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음. 이런 가운데 자체 방사능 기준치 마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해 오고 있는 한살림 등 생협 단체들은 탈원전,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한 활동과 함께 에너지 소비구조의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 활발히 필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정책 전환,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급확대에서 수요관리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함. 또한 전력 공급을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해외자원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기존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은 전체 발전설비 비중의 25%인 원전을 2030년까지 41%(발전량 기준 59%)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 원전 비리 등에 따른 신뢰도 하락 등도 에너지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까지 30% 감축) 또한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지난해까지 3% 수준으로, 이는 발전비율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임.

・현재의 높은 원전 비중과 전력난, 송전탑 건설 논란의 배경에는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59%로 확정한 지난 2008년의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데 이번에 발표된 2차 기본계획 역시 정부가 에너지 수요와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과거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음.

● 온난화 논란? 인류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지구온난화 가설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항공우주국(NASA)'이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촬영 사진을 비교한 결과, 북극 빙하 면적이 약 92만 평방마일 늘었다고 보도함. 이는 1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유럽 대륙 크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면적임.

・또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보고서를 통해 1961~1990년 평균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지구 기온이 0.65~0.9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 데 반해 지난해까지 실제 지구 온도는 0.45도 상승했으며 1998~2012년의 평균 온도 상승 속도는 1951~2012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힘.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지구 온도가 상승한 것이 인류의 지나친 화석연료 배출 활동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활동 주기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IPCC는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다시금 재확인하며 인간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실음.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이래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킬 확률은 지난 2007년 보고서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에서 '극도로 높다'로 상향함.

・그 근거로 대기와 바다가 과거보다 뜨거워졌다는 점, 상당량의 눈과 빙하가 사라졌으며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점 등을 들었으며, 2100년까지의 예상치에서는 기온 상승 속도 전망치를 낮추고 해수면 수위는 이전보다 높게 예측함.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는 평균기온 1.8도, 해수면 47cm가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당 보고서는 추가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에 있을 IPCC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임.

- 기후변화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로 2050년에는 세계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는 예측 또한 제기됨.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농작물 생산성이 10~20% 감소, 향후 20년간 주요 농작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함. 이에 따라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져 미래 세대의 식량난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 경고함.

・우리나라 또한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진행 중인 상태로,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배출될 경우 21세기말 한반도 기온이 5.7도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재배해 온 농작물의 산지와 품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골프장과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골프장 건설에 종지부 찍은 홍천군

・홍천지역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홍천시민공대위')는 지난달 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 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힘. 홍천군이 골프장 2곳을 취소한 데 이어 앞으로 새로운 골프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4일 동안 이어온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함.

・홍천시민공대위는 그동안 동막리 골프장 공사 중단, 갈마곡리 골프장 인·허가 취소, 월운리 골프장 계획 철회, 팔봉리 골프장 묘지 훼손 원상복구 및 토지 강제수용 철회 등을 요구해 왔음.

・홍천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여건 변화로 지역 내 골프장 경영이 악화됐고, 사업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환경 훼손 방지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새로운 골프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힘.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괘석리 골프장에 대해서는 "대책위 주민들이 포함된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함.

・이러한 홍천군의 결정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계속되어 온 강원도 골프장 건설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그러나 홍천 지역 내 동막리, 팔봉리, 구만리 등에서는 여전히 긴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골프장 문제 해결 촉구대회와 생명버스 운행이 오는 10월 25일과 11월 9일에 각각 예정되어 있는 등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한살림에서도 지난해 조합원 및 지역 환경단체 등과 함께 골프장 건설을 막고 농지와 숲을 지켜내는 생명버스 운행에 참여해 개발사업에 맞서 (유기)농지 및 생태보존을 위해 힘을 모은 바 있으며, 현재도 원주와 홍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참여를 이어가고 있음. 개발 사업으로부터 농지를 보존하는 문제이자 생명의 터전을 지켜내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두 번째 부결

・한편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와 대청봉 인근을 로프웨이로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이 한 차례 더 부결됨.

·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05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양양군이 올해 재신청한 오색지구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탐방로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허가 결정함.

· 지난해 6월에는 구례(지리산), 영암(월출산) 등과 함께 신청한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을 적용해 사업 불허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런 가운데 양양군은 설악권 일대의 관광경기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기존 안을 보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음.

- 개발과 파괴를 넘어 지속가능한 공존의 발전 전략이 필요

· 앞의 사례에서처럼 지자체들의 개발 계획들이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 또는 중단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하지만 지역이 처한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들은 더욱 빈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며, 전체 자치단체 중 재정수지가 흑자인 곳이 92개(37.7%)인 반면 적자인 곳은 152개(62.3%)로 훨씬 더 많음.

·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부채가 126조에 달해, 이후 상황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파산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나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발사업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사례들에서처럼 타당성과 영향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추진된 개발사업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정치 논리를 앞세운 일방적 사업추진 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존의 지혜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적 대안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수원시의 '차 없이 살기' 한 달간의 실험과 의미

- 석유고갈 시대 대비, 자동차 없는 삶을 경험하다

·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가

열림. 이는 한 달 동안 화석연료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석유가 고갈된 상황에서 인류의 적응 과정을 연구하고 미래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2200세대 4300여 명, 보유 차량 1500여 대)이 자동차 없는 생활을 직접 체험함.

・행사를 앞두고 보행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선을 땅에 묻고 인도를 넓히는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전시장, 생태교통을 이용한 투어 프로그램, 세계 생태교통 총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음. 이 기간 동안 국내외 1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행사는 세계 최초로 도시에서 생태교통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생태교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미래 일상을 예측하고,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 분담을 증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시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마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1년 전부터 수차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행사 취지를 적극 알려온 바 있음. 또한 폐막식에서 채택된 '생태교통 수원선언'은 '도시 교통정책의 생태교통 전환', '생태교통 수원서미트 추진', '수원시 생태교통 모델도시 노력 등'의 의제를 세계도시에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생태교통, 대중교통,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탄소 발생 없는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이 선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자전거 등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동 수단이 레저가 아닌 생활에 밀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자가용 이용자가 1주일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6.8리터의 휘발유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34.9kg의 온실가스 발행이 감소되어 소나무 7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대중교통 중심 정책은 석유고갈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절감이라는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관련해서 수원시는 기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전용공간인 (가칭)녹색교통 복지회관을 건립해 운수종사자들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계획을 밝힘.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운행을 위한 도로에서 사람을 위한 문화거리로 조성해 나갈 방침임.

분야별 동향 4 정치 • 사회운동

● 역사교과서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논란을 빚고 있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기록했기 때문이고, 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친일인사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제주도 4.3항쟁이나 5.18광주항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임.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은 공동 설명회를 열어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사실관계를 잘못 서술하거나 편파적으로 해석한 대목이 대략 298건에 이른다고 주장함.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가 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그런데 동서양과 고금(古今)을 통틀어 정당성 기반이 부족한 권력자들이 주로 역사 정리와 평가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가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것이 미래세대의 교육에 활용된다는 점임. 학생들 교육을 위한 자료를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격임.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이번 교학사 역사교과서 경우 헌법전문에 나타난 사실조차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시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헌법의 정신이 흔들리면 이후 법률 적용과 해석의 기본지침까지 훼손되는 만큼,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을 단순히 '실수'나 '오류'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역사관이 왜 중요한가?

・역사학자 전우용은 한 언론 칼럼에서 "국민국가 체제에서는 공동의 기억이 없으면 국가를 공동체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국민'으로서 공유해야 할 관점과 태도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어떤 정파나 사회 세력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사'의 역사관을 함부로 뜯어고칠 수 있게 허용한다면, '국사'는 국민을 통합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정신적 내란 상태로 몰아넣는 흉기가 되고 만다"며, 이번 역사교과서 사건을 '내란 예비음모'라고 부름. 이와 유사한 반응들을 인터넷 등에서도 확인됨.

・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역사'와 '국사'는 다르고, '시민'과 '국민'도 다르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역사가 지배자의 역사임을 부정한다면, 역사는 결코 하나일 수 없으며, 따라서 좌와 우의 이원론적 관점을 넘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것이 역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현재에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물론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는 관점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역사에 관한 해석을 국사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음. 이번 역사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되고 보완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역사교과서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골든 브릿지 노조의 최장기 파업이 던지는 질문

- 골든 브릿지는 어떤 회사인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전신인 '브릿지증권'은 영국계 투기자본 BIH가 유상감자와 구조조정으로 수천 억 원을 빼돌리고 소위 '먹고 튀기'(먹튀)를 하려던 회사임. 2005년에 과거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이상준 전 회장이 노동조합과 '공동인수 및 공동경영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설립함. 이 약정서에는 '직원들의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경영참가',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우리사주조합 추천 등기이사 선임', '우리사주 취득자금 즉시 출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일반 기업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주목받았음.

・그러나 회사 설립 이후 이상준 전 회장은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노조가 지나치게 경영에 개입한다며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탈법과 전횡을 저질러 왔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3개월마다 조직개편을 했고, 7년 동안 대표이사를 다섯 번이나 교체했음.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14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5억이 넘는 과징금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부과하고 이상전 전 회장과 남궁 정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음. 그리고 노조탈퇴 강요, 불법 대체근로 등의 부당 노동행위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상태임.

・그러자 회사는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노동조합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심지어 유성기업이나 발레오만도, 영남대병원 등에서 노동조합을 파괴한 회사로 유명한 노조파괴 전문회사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인사과장으로 채용했음. 이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조직적인 개입이 시도됨.

・결국 노동조합은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선택했고, 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최장기 합법파업의 기록인 '이랜드'의 510일을 지나 10월 1일 현재 527일차임. 파업으로

는 '재능교육노조'의 2,075일이 최장기이지만 비정규직의 파업이었고, 정규직 금융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으로는 최장기임.

-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현재 '희망나눔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채권의 최소금액은 5만원이고 개인과 단체 모두 구입을 할 수 있음.[8] '희망나눔채권'은 파업이 끝난 뒤 1~2년 사이에 상환을 하는 연대채권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조합원의 최저 활동비와 지부 투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채권수익율은 0%이지만 희망을 나누는데 의미를 두고 있음.

· 이 파업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자산이 증가한 409개 기업들 중 86개 기업들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대량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를 했던 쌍용자동차의 경우 4년 동안 자산이 1,524억 원이나 늘어남.

· 또한 2000년과 비교할 때 2011년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532.9% 증가했는데,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86.4% 늘어남. 즉 이것은 기업의 수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편, 같은 기간에 법인이 낸 세금 증가율은 151%인데, 개인소득세 증가율이 141.5%로 거의 차이가 없음.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 부담을 공평하게 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런 문제는 기업경영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함.

· 따라서 김상봉 교수는『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에서 나라의 시민들이 자유로운 주권자이듯이 노동자들 역시 기업의 주권자가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영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구조적 실업 문제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넘어서 대안적 노동의 모델로서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가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함.

● 식량주권과 먹거리 인권에 대하여[9]

- 왜 먹거리 인권인가?

· 먹거리는 먹어야 사는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먹거리 인권(right to food)'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포

8) 희망나눔채권은 (http://golden.nodong.net/)에서 구입 가능
9) 2013년, 성공회대 사회학과 조효제 교수는《민주주의와 인권》에 "먹거리 인권과 먹거리 주권의 시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식량주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좋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논문이라 여겨져 소개한다.

함된 내용이기도 함. 하지만 한국에서는 먹거리 인권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먹거리(food),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고 규정
- 먹거리와 관련해서 단지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을 누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음식,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정함
- 특히 이 규약은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감안하면서, 인간의 욕구에 근거하여 세계 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립할 것"도 규정하고 있음
- 단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온당하고 적절한 먹거리를 먹고 이의 공정한 분배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1999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 20차 회의에서 "일반논평 12(General Comment 12)"를 발표하고 먹거리 인권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혼자서,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적절한 먹거리 및 그것의 확보수단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함
- 또한 이를 위해 "주도적인 사회·경제·문화·기후·생태·기타 조건들에 부합하는 적절성(adequacy)을 갖추어야 하며, 먹거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는 먹거리의 장기적 가용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국가가 먹거리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음.

· 한국도 1990년 7월 10일 이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이 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먹거리 안보, 먹거리 주권, 먹거리 인권의 연관성>

구분	먹거리 안보	먹거리 주권	먹거리 인권
패러다임	먹거리 레짐	먹거리 운동	먹거리 운동 농업운동
목표	먹거리의 보편적 접근	먹거리 생산 및 소비의 공정한 분배체계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정권
주요 모순	빈곤, 분쟁, 부정부패, 환경훼손	다면적 먹거리 불의 계급 및 인종의 먹거리 불평등 기존 농식품체계	전지구적 농식품체계
해결 방안	국제협력, 국제무역	공평한 먹거리 분배체계 먹거리 차별금지 농식품체계 개선 먹거리 불의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서사 창조	농생태적 영농 농업의 다기능성 지속가능한 영농 먹거리 생산자 및 소비자의 결정권 식량자급률 제고
상업적 먹거리 레짐에 대한 태도	먹거리 레짐 인정 문제점 시정	먹거리 레짐의 차별성과 불의 비판 먹거리 레짐의 철저한 개혁	현행 먹거리 레짐 거부
이념적 위치	개선	개혁	변혁
속성	기술적(technical)	규범적, 정치적	사회운동적, 정치적
인권가치 평가	인권가치 인정	기존 인권가치 중시	새로운 인권가치 창출
먹거리 인권에 대한 입장	도구적: 먹거리 안보다 효과적이려면 인권담론 활용 필요	규범적: 적절한 먹거리 인권 강조	확장적: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정권 중시
특히 강조하는 인권의 대상	모든 사람의 먹거리 접근권	먹거리의 공평한 접근권 및 먹거리 불의 타파	소농, 무토지농민, 여성, 원주민, 농촌노동자 권리
먹거리 인권과의 관계	소극적 접점	적극적 결합	적극적 수용 급진적 재구성

- 먹거리 인권 사례

· 2007년 2월 27일, '먹거리 주권포럼 선언'(일명 '닐레니 선언')

- 80여개국 농어민, 농업노동자 단체 회원 500명이 참여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권리를 전제한 후 원칙을 밝힘
-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세계인권선언 및 사회권 국제규약의 내용과 일치)
- 인민들이 스스로의 먹거리와 농업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소비자들이 자신의 음식과 영양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토지, 농업용수, 종자, 가축, 생물다양성을 활용하고 관리할 권리
- 식량생산에 있어 여성의 역할과 권리

- 토지에 대한 권리
- 노동권, 영토와 자기결정 권리
- 초국적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할 권리
-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농민인권 운동가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 것 등

· 2009년 3월, <비아 캄페시나>는 '소농 권리선언 – 여성과 남성'을 선언

- farmer가 아니라 peasant로 소농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부제를 추가해 남녀간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전통적 권리인 생명권과 적절한 생활수준 권리만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 의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같은 인권을 수용
-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종자권리와 전통적 농업기술 실행권리, 농업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 정보권리와 농업기술 권리, 농산물의 가격과 시장을 결정할 자유, 농업의 가치보호 권리, 생물다양성 권리, 환경보전권리 등을 선언

· 2011년 5월 27일, <국제토지연합(ILC)>은 극심한 자원경쟁 시기에 빈곤층의 토지 접근권 확보를 위한 '티라나 선언'을 발표

- 토지, 물, 산림, 방목지, 생물다양성 등의 천연자원을 놓고 불공정한 경쟁이 격화되고 증가하는 현상을 비판
- 지역사회가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권리를 인정하는 영토적 비전을 주장
- 토지와 농업에 있어 주요한 투자자로 인정받아야 마땅한 소농 생산자들의 공평한 토지접근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
- 모든 형태의 토지 수탈과 인권 특히 여성 권리를 유린한 상태에서 토지를 확보하거나 헐값에 사들이는 행위를 규탄
- 인민 중심의 토지 거버넌스'(people-centred land governance)의 필요성을 강조

살·림·의·말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속하는가?

- 가을걷이잔치한마당에서 생각해보는 '순수증여'의 의미 -

최근 고추 때문에 한살림 매장이 뒤숭숭했습니다. 주문을 취소하기도 하고 아예 주문 사실을 부인(?)하는 조합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한살림 고추값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올해 시중 고추값이 너무 싸다는 것이지요. 올해 공급되는 한살림 고추는 근당 21,000원쯤 됩니다만, 시중 고추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고추가 흉작이어서 국산 고추 자체가 귀한 데다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한살림 유기농고추와 시중 관행 고추 사이에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한살림생산자들은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반대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풍작으로 시중에 고추가 넘쳐나면서 조합원들이 한살림 고추 이용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작년엔 없어서 문제, 올해는 남아서 문제입니다. 그래도 10월 10일 현재 전반적으로 애초 약정량의 70% 정도는 주문이 이루졌다고 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한살림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주제,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속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소비자들의 고추 책임소비 안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각 지역별로 펼쳐지는 가을걷이 행사에 가서 생산자를 만나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고추파동(?)과 가을걷이잔치한마당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한 한살림의 시스템적 비결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약정(約定)'입니다. 그런데 약정의 바탕에는 공생의 철학과 상호 신뢰가 깔려 있으며, 그 철학과 신뢰를 몸으로 확인케 하는 자리가 가을걷이잔치 한마당인 것입니다. 가을걷이 한마당을 통해 생산자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고추를 비롯해 이러저러한 파동(?)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불편함도 털어내면서 서로서로가 정말 '한살림'이라는 것을 확인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전인 1989년 11월, 한살림 '생산-소비자 가족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이라는 글귀가 쓰여진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의 이순로 이사장님과 한살림생산자공동체협의회 김영원 회장님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표하여 맞절을 올립니다. 그 당시 한겨레신문에 제법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맞절하는 두 분의 모습

이 눈에 선합니다. 그해 1989년 6월 11일에는 충북 음성군 성미마을에서 첫 번째 단오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단오와 가을걷이,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렇게 일 년에 두 번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가을걷이마당이 중요합니다. 가을걷이란 말 그대로 '가을에 여문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입니다. '추수감사제'라고도 하고 '가을걷이잔치'라고도 했습니다. 추수(秋收)가 곧 '가을걷이'를 의미하니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가을걷이' 행사가 시작된 것이 1992년이니까 올해로 22번째가 됩니다.
가을걷이 행사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생명의 먹을거리를 정성을 들여 가꾸어 공급해준 생산자에게 감사하고, 시장의 고추가격이 떨어지거나 사과가 좀 못 생겼어도 약속을 지키는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맞절이 상징하듯이 생산자와 소비자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혜와 신뢰에 기반한 '생산-소비 협동'은 한살림공동체의 지속성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협동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고파는 관계가 아닌 주고받는 관계, 즉 증여와 답례에 기초한 새로운 생활양식과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가을걷이잔치 한마당은 생산-소비 호혜시스템과 공동체정신(한살림마음)을 축제로 승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산-소비 협동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속된 말로 2%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왜 가을걷이잔치를 '추수감사제'라고 부를까? 왜 "천지신명" 운운하는 고천문을 읽어야 할까? 무대 앞에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 휘장이 걸려 있을까?
요컨대, 한살림 생산-소비 협동공동체의 기초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호혜 관계와 신뢰에 기초한 계획생산-책임소비의 약정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답례는 옆으로 하는 것."

무위당의 '공동체의 성공 조건'

언젠가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공동체의 성공 비결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결'이라니 귀가 솔깃해집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나 지속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위당의 행적과 말씀을 모아놓은 어느 책에서는 그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깃발을 너무 앞세우지 마라. 둘째 공(功)을 남에게 넘겨라."가 그것입니다.
깃발 이야기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념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마라는 의미로도 읽혀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욱 눈에 들어옵니다. "공(功)을 남에게 넘겨라." 아마 이 말씀을 하실 즈음, 주변에서 공로를 다투는 일이 눈에 띠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답례는 말이지. 이렇게 꼭 앞으로 하지 않고 뒤나 옆으로 해도 돼. 누군가에게 뭘 줄 때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아예 받을 생각을 말아..."

역시 공을 내세우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무위당의 '옆이나 뒤로 하는 답례'는 도덕규범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호혜는 둘 사이 쌍방향의 1차원적 주고받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옆이나 뒤로 하는 답례'를 통해 증여와 답례, 즉 호혜적 관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호혜의 그물이 만들어집니다. 호혜의 순환, 명실상부 호혜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괜찮아.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줘~" 합리성의 잣대로 보면, 공을 넘기는 것도 답례를 옆으로 돌리는 것도,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이럴 때에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과 상벌만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무위당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조건 없는 증여', 즉 '순수증여'가 그것입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품되 아무데서도 바라는 게 없지요?"

무주상보시라는 말은 불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위당의 말대로 '조건 없는 베풂'을 말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를 빌어서 이야기했지만, 모심의 생명사상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답례를 바라지 않는 베풂'이야말로 진정한 '모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심에 조건을 달면 거래가 됩니다. 물론 거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모심'을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증여와 답례를 통해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서려 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미 거기까지 갔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순수증여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 안에 공동체 나머지 2%가 숨어있습니다(사실은 200%이지만). 경제인류학에서 말하는 증여와 답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혜적 관계는 이제 '순수증여'의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추수감사제의 속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농업과 자연의 순수증여

얼마를 주었는지, 누구한테 주었는지, 언제 돌려받을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냥 주기'가 순수증여, 즉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의 품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짐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1998년 <한살림가을걷이잔치한마당> 초대장에 이런 문구가 써있습니다. "자연생태계 질서에 따르는 생산과 생활양식의 대안을 확인하는 자리." 좀 어렵기도 하고 순수증여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 뜻하는 바는 짐작이 갑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무주상보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생태적 삶의 실천이 그것입니다.

10월의 누런 들녘은 풍요롭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연에게, 천지신명에게 정말 고개를 숙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볍씨 한 알'이 '벼 한 포기'가 되면 대체로 낱알 2천개가 생산됩니다. 엄청난 뻥튀기(?) 입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입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만, 한 포기에 벼이삭 20개가 붙고 벼이삭 당 평균 낱알 수가 100개라면 2천 알이 됩니다. 벼뿐만이 아닙니다. 한 알의 씨앗에서 수천수만 배로 폭증하여 생산되는 밀, 콩, 옥수수, 감자 등등.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품농업 이전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논물도 대고 피도 뽑는 등 적지 않은 노동이 필요하지만, 농민들의 수고에 비해 자연이 주는 혜택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도시텃밭에서 체험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매달린 방울토마토를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품농업, 돈벌이농업 시대의 농업경영자(?)에게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을걷이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입니다. 종자, 농약, 비료에, 비닐하우스 자재에다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의 원리금까지... 가을걷이는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납니다. 풍작이든 흉작이든 계의치도 않습니다. 가격과 수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벌이농업에서는 흉작이라도 가격만 좋으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매출-비용=수익',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수천수만 배로 폭발한 자연생태계의 기적은 돈벌이 앞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은 자본이며, 자신의 생산기술이며, 적기 출하와 판로개척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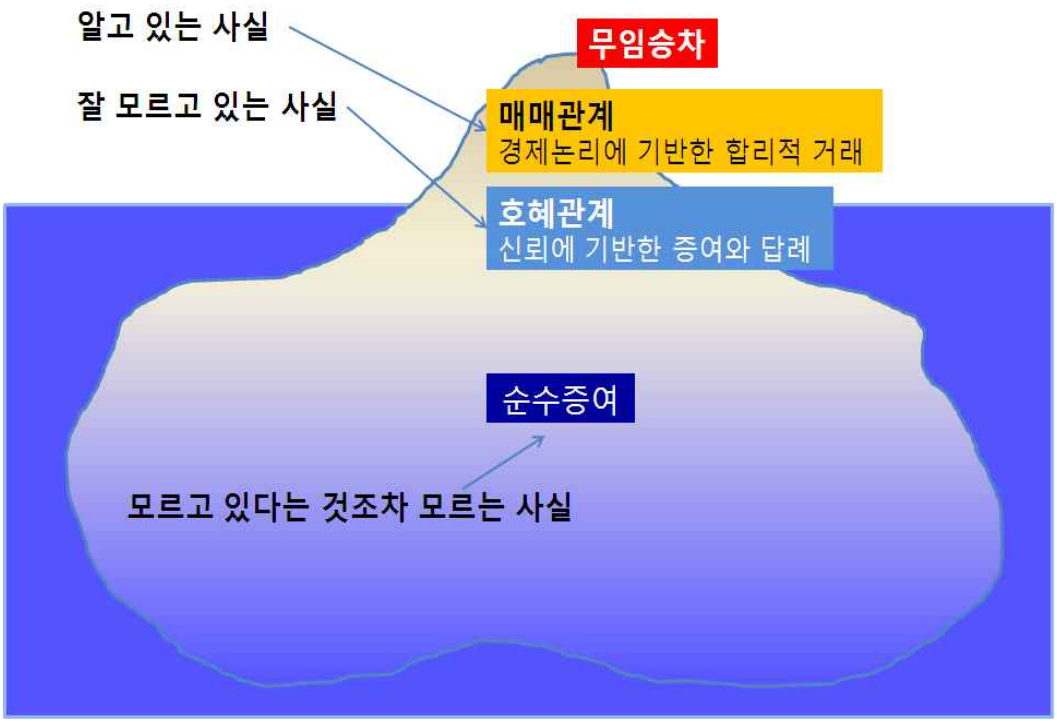
돈벌이농업에서 하늘은 원망의 대상이 될지언정 감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농업과 자본주의 농업의 차이점입니다. 원래 농업은 자연의 순수증여에 의존하였습니다. 농업은 그나마 인간의 노동이 매개되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자연이 '그냥 주는 것'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먹을거리는 물론이거니와, 물과 공기를 생각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공기(산소)가 없다면 생명은 단 3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호사가들은 자연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돈으로 계산해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부질없

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책임소비가 아닙니다. 추수감사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걷이 행사의 핵심은 '추수감사제'에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햇볕에 대한 감사, 자연에 대한 감사, 천지신명에 대한 감사가 그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농사짓는 일이 순수증여에 가장 가깝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증여,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비밀

다시 무위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유지의 숨겨진 비밀을 쫓아가 봅니다. 옆으로 답례와 무주상보시가 그것입니다. 매매관계 아래 신뢰에 기반한 증여와 답례, 그리고 그 아래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순수증여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이름 없는 조합원 및 생산자 회원들의 기다림과 조건 없는 베풂, 혹은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에 한살림의 생명-협동운동이 지속가능했습니다.

<한살림 생명-협동 공동체의 전체상>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경제논리에 기반한 거래, 매매관계는 빙산의 위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가끔 무임승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숨겨진 부분, 즉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관계가 없으면 공동체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올해 당장 손

해가 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없으면 정교한 물류시스템도 무용지물입니다. 한살림매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고파는 매매관계의 이면에는 호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증여,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숨은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100을 주고 100을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얌체같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워주는 존재가 없으면 조직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손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농민생산자일 수도 있고, 이름 없는 조합원이나 활동가일 수 있고, 무위당 선생님을 비롯한 1세대 선배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연 지구생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처럼, 순순증여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친구의 소리 소문 없는 도움이나 지나가는 한 마디의 격려도 그렇습니다. 동네 계모임에도 속 깊은 언니나 사람 좋은 아저씨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무임승차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순수증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구생명공동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순수증여의 여백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비밀인 것입니다.
보이는 질서와 숨겨진 질서이기도 하고, 지상과 지하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사실 제일 적합한 설명은 음양론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지상 2층: 무임승차.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 지상 1층: 합리적인 사람. 더도 덜도 없이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 자신의 의무도 지키고 권리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의무보다 권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여기를 중심으로 유지됩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의 시스템입니다. 양(陽)의 공동체입니다.
- 지하 1층: 정관에 나오는 권리와 의무는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당장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살림과 같은 공동체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땅밑 기둥이 됩니다. 음(陰)의 공동체입니다.
- 그리고, 지하 깊은 곳 순수증여.

이는 정확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와도 정확히 대응합니다. 독점자본-자본주의 시장경제(돈벌이경제)-호혜주의시장경제(살림살이경제)-순수증여(자연경제)가 그것입니다. 자본주의 산업문명은 순수증여의 자연생태계를 약탈하며 공룡처럼 커졌습니다. 자본주의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호혜시스템조차도 보이지 않는 순수증여가 있어 작동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음양의 역동적 균형입니다. 음은 선하고 양은 나쁜 것이 아니듯 자본주의 시장도, 조직체계나 규칙도 중요합니다. 다만, 잊고 있었던 잘 몰랐던 것을 되

살리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눌린 '음의 경제'의 부활과 '음의 경제'와 '양의 경제'의 균형.)

모심과 순수증여

'모심'이란 천지만물 모든 생명을 차별없이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공경하려면 나의 에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면서 남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비우고 또 비우면 내 안에 있는 지극한 하나됨을 만나게 된다고 성인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천지만물이 또한 다르게 보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심의 첫 마음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모심의 종착점은 순수증여입니다.
순수증여는 모심의 지극한 표현입니다. 답례를 바라지 않는 순수증여는 훗날 더 큰 유무형의 보상을 기대하는 희생과는 구별됩니다. 순수증여의 존재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증여는 깨달음입니다. 모심의 마음입니다. 무위당의 말처럼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말해 '그대가 곧 나'라면 주고받고 할 것조차 없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자매라면, 줄 때나 받을 때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데 거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순수증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지향은 그렇게 하되, 중요한 것은 순수증여의 존재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마음 속 깊이 감사할 일입니다. 협동조합이든, 공동체든, 조직이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한없이 착한 누이들, '바보' 같은 사람들, 공기, 물, 어머니 자연이라는 것을. 그들의 있어 우리가 있다는 것을.(끝)

격월간 정세와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0호

책임편집/이슈진단 | 정규호
분야별동향 | 박지은 하만조 김현 하승우
살림의말 | 주요섭

펴낸날 2013년 10월 17일
펴낸이 박맹수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

격월간 정세와 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0호

펴낸날 2013년 10월 17일 | 펴낸이 박맹수 |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